

국유지를 활용한 청년·신혼부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

(국고국, 국유재산조정과, 사무관 오성태, 044-215-5252)

I. 추진 배경

- 그간 정부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대책* 발표 →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의식한 지자체 협의지연 등으로 가시적 성과 미흡

* 문재인정부 2만호 공급 발표('21.8월)에 이어 윤석열정부도 '35년까지 2만호 공급 발표('24.8월) → ('25.8월 기준 공공주택 공급현황) 준공 590호, 공사중 2,578호

- '22년부터 서울·수도권 착공 크게 감소* →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여력 낮은 상황

* 최근 3년 착공('22~'24 평균, 만호): [서울]3.9 (10년^평68比 58%), [수도권]15.8 (10년^평25.8比 61%)

⇒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 필요

II. 정책 내용

- (국유재산종합계획)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·서민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약 3.5만호+a 공급(국유심, 8.12.)

- '35년까지 기계화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 신속 공급
- 도심 노후 공공청사,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하여 신규 공공주택 약 1.5만호+a 공급 추진

- (주택공급 확대방안) 도심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, 국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'30년까지 수도권 2.8만호* 착공(부처합동, 9.7.)

* 국유재산 2만호(기재부 발굴) + 공유·공공재산 0.8만호(국토부 발굴)

- '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' 제정('25)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, 국가 직접 인허가, 행정·재정적 지원 추진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(점검체계 구축) 경제부총리(위원장), 국토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주택공급관계장관회의 개최(11월~, 격주)

* (관계부처 점검단 운영) 기재부(재정관리관 단장), 국방부, 고용부, 우정사업본부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

- (이행계획 수립) 연내 1차 대상지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·지자체 협의 및 주택 공급계획 구체화 →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상지 확정

* (향후일정) 대상지별 사업계획(사업시행자, 개발방식, 자원분담 등) 수립(26.3월말) → 예산 반영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(26.6월말) → 설계(27~28년) → 착공(29~30년)